

# “공공의대 설립 확정 전북의 새로운 희망”

### 송하진 도지사, 당정 협의안과 관련

“2024년 3월 개교 현실화 행정절차 차질없이 진행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지정 공공의대와 함께 보건 위기대응 양 날개 키워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3일 당정이 사실상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확정된 데 대해 “서남대 폐교로 지역경제침체와 의료인력 공백을 겪어 온 전북에 새로운 희망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특히 당정이 의대정원 확대와 별개로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대 입법을 추진하는 데 해신 “지역 정치권과 행정, 도민들이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한마음

“이를 위해 당정협의안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법안의 신속 통과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사태는 공공의료체계와 감염병연구역량 등 국가의 보건위기대응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아시아 최대 규모인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신속히 지정해 공공의대와 함께 보건위기대응을 이끌 튼튼한 양 날개로 키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송하진 지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광역시·도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법안 통과를 비롯해 국립감염병 연구소 지정, 제3금융중심지 추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북 지정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는 23일 제11대 후반기 의회에 들어 첫 현장 업무보고 및 사업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전북테크노파크(TP) 및 경제통상진흥원 등을 차례로 방문해 첫 업무보고를 받은 농산경제 위원들은 현지 시설들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직접 챙겼다.

## “제조업 부흥시킬 산업 전략 필요”

### 도의회 농산경위, 현장 업무보고·기업인 간담회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23일 제11대 후반기 의회에 들어 첫 현장 업무보고 및 사업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전북테크노파크(TP) 및 경제통상진흥원 등을 차례로 방문해 첫 업무보고를 받은 농산경제 위원들은 현지 시설들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직접 챙겼다.

먼저 전주 팔복동에 소재한 테크노파크에서 국주영은(전주9) 의원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과 관련해 “올해 예산이 65억원에 달하는 사업인데도 지금까지 계획만 수립하고 회의만 하는데 허송세월과 예산만 낭비했다”면서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지역성장거점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촉구했다.

나인권(김제2) 부위원장은 “TP가 전북경제산업에 가장 필요한 기업유치에 관한 전략과 목표를 전혀 제시하지

도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전북의 성장동력산업 집적화를 위해 기업유치 업무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이한기(진안) 의원은 “전북 경제상황이 가장 위급한 상황인데도 테크노파크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도 없고 목표도 없다”면서 출연기관장으로서 전북의 청년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두세훈(완주2) 의원은 “전북TP의 경우 먼저 입사한 선배가 1년 후배직원보다 연봉이 적은 연봉역전 현상에 대해 문제가 될 것을 뻔히 알고도 손 놓고 있었다”면서 출연기관의 보수체계와 관련해 전북도와 협의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책임을 따져 물었다.

송성환(전주7) 의원은 “전북의 산업진흥계획과 전략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북TP가 산업정책수립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못하고 매년 오락

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제조업이 허약한 전북의 산업을 부흥시킬 핵심 전략 추진을 강조했다.

김철수(정읍1) 위원장은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를 한 양군의 TP원장에 향해 “전북의 경제 위기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전북의 산업전략과 중소기업을 견인할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산업과학기술 혁신거점기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강조했다.

TP의 업무보고 청취 이후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농산경제 위원들은 입주업체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오후에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장소를 옮긴 농산경위원들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전북 수출기업의 지원 방안과 청년유출을 막기 위해 취업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조지훈 원장에게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전주천을 살립니다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 고향에 기부금제 도입 균형발전 도모

### 민주 한병도 의원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법’ 대표발의

고향에 기부금제를 도입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 의원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법안은 고향에 기부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생산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부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아닌 지자체더라도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답례품은 지역 상품권, 지역 관광지 입장권이나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과 같은 품목만 가능토록 해 고향 방문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법안은 강제 모금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공무원을 동원해 부정 모금을 한 지자체에 대해 일정 기간 기부금의 모금 및 접수세를 제한하겠다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만들었다.

더불어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시정 권고 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답례품 규정을 위반해 현금이나 귀금속 같은 부적절한 물품을 제공한 지자체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전액 반환 조치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나고 자란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제도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계기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 지방소멸위기지역 생활 인프라개선

### 민주 이원택 의원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23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이주희망지원센터를 설치해 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 △이주희망사업에 법인에 관한 지원책을 강화 △교육행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협력을 할 수 있는 구조 △지역 농·수산업의 판로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외에도 교육, 문화, 관광시설에 대한 지원과 자녀장려세제, 영유아보육 지원 등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기반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현재 농산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속에 생산가능 인구는 더욱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른 인구절벽 쇼크와 지방소멸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소멸 위기지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 됐다.

/유호상 기자



## 이용호 의원, ‘재해 피해 농어민 보호법’ 대표발의

이용호 국회의원이 자연재해 피해 농어민들의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지난 4월 영하권으로 떨어진 이상저온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7만4,204ha에 달하는 농가가 48,612ha의 면적에서 냉해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67배를 넘어선다.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 선정, 보상 범위 및 손해평가 방법·절차 등을 포함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각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소속의 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보험가입자는 구성에 포함되지 않아 의견 제언이나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관련 규정에서 전무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심의회가 보상 재해범위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다.

/유호상 기자